

제13장 자연 너머의 지리학

Cresswell, T. (2024). 지리사상사. (박경환, 류연택, 심승희, 정현주, 서태동, 역). 시그마프레스. (원본 출판 2024년)

지리사상사 세미나

2025.08.05

최경현

이 책의 앞 부분에서 보았듯이, 1950년대 이후 지리학은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으로 전문화되고 분리되었다. 본 장에서는 책 전반에서 살펴본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 간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연지리학의 관점에서 이론과 철학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 재결합하기

도린 매시(Doreen Massey)는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을 재결합할 수 있는 기반으로 공간-시간(space-time)의 개념을 제안했다. 그는 장소는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고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형되는 일종의 "개방 체계"로 보았으며,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 모두 "복잡한 것에 대한 과학이자 역사적인 것에 대한 과학"(Massey, 1999, p. 266, Cresswell, 2024, p. 427에서 재인용)이기에 보편 법칙을 추구하는 고전 물리학을 모델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인문지리학자들과 자연지리학자들은 특정 장소에서 역사적인 것과 지리적인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기에 그 사이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재결합의 노력은 대부분 인문지리학자들이 주도했지만, 자연지리학자 역시 재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자연지리학자 조나단 필립스(Jonathan Phillips)는 측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지리학의 발전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도(河道) 변화 연구에 자연지리적 현상 외에도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을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주체성을 배제하고서는 자연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인문지리학자인 브루스 브라운(Bruce Braun)이 물을 다루는 인문지리학자들이 물의 물리적 속성을 간과한다고 비판한 것과 정확히 대칭을 이룬다. 필립스는 나아가 과학이 법칙추구적인(nomothetic) 것과 관련되어 온 것과 달리, 특수성과 역사적·지리적 우연성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자연지리학이 법칙추구적 접근과 개성 기술적 접근의 종합이라는 과업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지리학자에게 이론과 철학이 왜 중요할까?

전통적으로 자연지리학자들은 이론이나 철학보다 경험적 형식의 탐구를 중시해왔다. 그러나 자연지리학의 실천에도 이론이 담겨 있다. 20세기 초 과학을 지배했던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는 관찰할 수 있는 경험에 기반한 지식을 장려하도록 했다. 그 철학적 스펙트럼 극단에는 구성주의(constructionism, constructivism)이 있는데, 이러한 철학적

사조에서는 관찰은 항상 이론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과학적 실재론(scientific realism)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관념을 넘어선 세계의 실재(reality)를 주장하지만, 이론과 이러한 실재는 불완전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지형학은 지형을 연구하며, 이는 분류 행위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지형이 자연종(natural kinds)¹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이러한 질문은 철학적이다. 만약 자연지리학의 대상이 자연종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구성주의적 관점에 가까워진다. 다윈주의적 실재론(promiscuous realism)은 세계가 실재하지만, 그것을 분류하는 방식은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미국에서 토양의 분류를 다르게 한다는 점은 그것이 지정학적(geopolitical)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측정 역시 가치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다. 블루와 브리얼리(Blue & Brierley, 2016)는 하천 관리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의 선택 자체가 연구자의 가치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며, 그 측정 기준이 정책과 결합되면 화석화된 지식(fossilized-accepted)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연지리학자는 자신의 행위 속에 이미 철학적·이론적 결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지형학의 접근 방식

지형학의 역사 역시 이론적 관점의 변화를 보여준다. 20세기 초 지형학 분야를 선도한 윌리엄 모리스 데이비스(William Morris Davis)는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지형이 진화한다는 침식윤회설을 주장했다. 반면 그로브 칼 길버트(Grove Karl Gilbert)는 관찰된 경관 형성 이면에 어떠한 형성 과정(process)이 작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설 검증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프로세스 관점에서 경관을 바라보았다. 데이비스의 이론이 오랫동안 주류였던 것은 그의 이론이 당시의 '거대한 이론(big theory)'을 통해 다른 분야와 연결되었으며, 그가 하버드대학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기 때문이며, 이는 과학의 사회적 성격을 보여준다.

데이비드 서그덴(David Sugden)은 남극 동부의 빙상의 역사에 여러 설명이 상충하는 것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론적 관점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변화론자(dynamists)는 미시적인 증거에 집중하는 반면, 안정론자(stabilists)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관을 바라보았다. 서그

¹ '종(kind)'은 어떤 본성(nature)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유사성을 갖는 개체들의 집합이다. 이는 아무런 본성도 공유하지 않는 개체들의 단순한 묶음인 '단순 집단(class)'과는 구분된다. '자연종(natural kind)'은 종의 한 종류로서, 밀(Mill)이 제시한 세 가지 주요 기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1. 한 자연종에 속하는 개체들은 서로에게서 비롯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속성을 공유한다. 2. 한 자연종은 그 속성에 대해 귀납적인 일반화가 가능하다. 3. 한 자연종의 여러 속성들은 우연히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본적인 본질에 의해 인과적으로 설명되는 체계를 이룬다(최성호, (2021). 노인이란 무엇인가? -인간종에 대한 탐구를 위한 시론-. 철학사상, 82, 159-200).

덴은 이를 통해 자연지리학이 해석적(interpretive) 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석 지형학(hermeneutic geomorphology)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비판적 자연지리학과 인류세

비판적 자연지리학(critical Physical Geography, CPG)은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시도 중 하나이다. CPG는 “사회적-생물리학적 경관은 수문학, 생태학, 기후변화만큼 불평등한 권력 관계, 식민주의의 역사, 인종 및 젠더 격차의 산물”(Lave et al, 2014, p. 3, Cresswell, 2024, p. 442에서 재인용)이기도 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이 ‘인류세’이다. 인류세는 인류가 지질학적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현 시대를 일컫는 명칭이다.

그러나 캐서린 유소프(Kathryn Yusoff)는 『10억 개 혹은 0개의 흑인 인류세(A Billion Black Anthropocenes or None)』에서 인류세 개념이 보편적인 ‘인류’를 상정함으로써,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를 통해 부를 축적한 ‘글로벌 북부’의 백인 남성의 책임을 은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질학이라는 과학 자체가 신대륙의 자원 착취와 대서양 노예무역의 역사에서 출발한 ‘백인 지질학’이었음을 폭로하며, 인류세 담론이 이러한 인종주의적 역사를 지운다고 주장하였다.

CPG는 이러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수용해, 환경 지식이 생산되는 시공간적 맥락과 권력 관계를 질문한다. ‘심층기술지형학(ethnogeomorphology)’은 원주민이 서구 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탐구하려는 시도이다. 더 나아가 페미니스트 빙하학은 빙하에 대한 지식이 남성 중심적이고 영웅적인 탐험 서사 속에서 생산되어 왔음을 비판하고, 지식 생산자의 젠더, 과학 자체의 젠더화, 그리고 원주민의 지식과 같은 대안적 지식의 중요성을 질문한다. 이러한 시도는 자연과 과학이 사회적·정치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는 CPG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발제문 – 인류세를 둘러싼 서구 중심의 담론과 아시아의 이중적 주변화

서론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용어는 현재 시대의 지구 환경 위기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이는 인류가 지구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지질학적 힘(force)가 되었음을 알리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13장 자연 너머의 지리학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명명 행위 역시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리처드 출리(Richard Chorley)의 ‘토양 오거를 꺼내드는 지형학자가 철학과 관련이 없을 수 없듯이, 새로운 시대를 명명하는 행위 역시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세계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본 발제문은 ‘인류세’라는 개념이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 규정을 넘어, 특정 역사를 은폐하고 보편성을 가장하는 정치적 담론임을 주장하는 캐서린 유소프(Kathryn Yusoff)의 비

판을 출발점으로 삼아, 인류세 담론이 서구 중심의 역사 서술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발제는 인류세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조차 대서양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동아시아의 특수한 경험을 이중적으로 주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험은 서구 자본주의의 책임 전가와 불균등한 생태적 교환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하며, 인류세라는 용어에 담겨 있는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불평등한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인류’에 대한 캐서린 유소프의 비판

제13장에서 다루어진 유소프는 저서 『10억 개 혹은 0개의 흑인 인류세』를 통해 인류세 개념의 기만성에 대해 논한다. 그의 비판은 ‘인류’라는 보편적 주어가 어떻게 역사적 불평등을 지우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인류세는 환경 파괴의 책임을 모든 인류에게 동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와 식민주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자원을 착취한 ‘글로벌 북부’의 백인 남성의 역사적 책임을 희석한다. 이로 인해 노예제와 식민지 착취의 피해자 마저 가해자와 같이 범주화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유소프는 더 나아가 지질학이라는 과학 자체가 가지총립적이지 않으며, 자원 착취와 인종주의적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백인 지질학’임을 지적한다. 지질학은 신대륙의 광물을 식별하고, 영토를 자원으로 바꾸는 식민주의의 핵심 도구였으며, 이 과정에서 흑인과 원주민의 땅과 신체는 ‘자원’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인류세 담론은 이러한 과학의 공모적 역사를 성찰 없이 수용하며, 보편적 자유주의 주체를 ‘인류’로 상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인류세의 주어를 ‘인류’에서 ‘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세(Capitalocene)’와 같은 대안적 개념이 등장했으며, 이는 자본의 지리적 이동과 이에 따른 책임의 문제를 분석하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안 담론 속 아시아의 부재

인류세의 보편성을 비판하며 등장한 대안적 개념은 부분적으로 이론적인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들 역시 특정 지역의 관점에 갇혀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자본세는 주로 유럽의 산업혁명과 그곳에서 형성된 자본-노동 관계에, 플랜테이션세(Plantationocene)는 대서양 노예무역과 아메리카 대륙의 플랜테이션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이 개념들은 인류세의 보편성을 비판하면서도, 그 자신들 역시 특정 지리적·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안 담론들이 주로 ‘백인-흑인/원주민’이라는 이분법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제국주의와 냉전 질서 속에서 복잡하고 독특한 경로를 겪어온 아시아의 역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쿨리(coolie)’로 대표되는 전세계에서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한 아시아인,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지·반(半)식민지 상태, 그리고 이후 ‘세

계의 공장'으로 글로벌한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역사는 기존 대안 담론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않는다. 결국 동아시아는 '인류'라는 보편적 명칭을 통해 한번 주변화되고, 서구 중심의 저항 담론 속에서 다시 한번 그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이중적 주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서구 자본주의의 책임 전가

동아시아의 근대화는 서구 제국주의와 그들이 주도해 구축한 전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응'이자, 그 체제 내에서의 '역할 수행'이었다. 특히 20세기 후반, 서구 선진국들이 자국 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며 오염 유발 산업과 저임금 제조업을 동아시아로 아웃소싱한 역사는 인류세의 책임 소재를 묻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는 '깨끗한 서구'와 '오염된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국제적 생태·노동 분업의 구도를 형성했으며, 환경적 부담과 책임을 지리적으로 전가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급격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지형학적 영향은 독립적인 발전의 결과만이 아니라, 서구의 소비 생활을 뒷받침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며 발생한 '전가된 환경 부담'의 결과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동아시아의 탄소 배출을 기후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하는 서구 중심의 환경 담론은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한 외면을 통해 또 다른 방식의 기만적인 '책임의 보편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인류세는 보편적 '인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식민주의와 신(新)식민주의적 국제 분업을 통해 환경적 책임과 부담이 특정 지역으로 전가되어 온 불평등의 역사이다. 인류세에 대한 비판적 대안조차 특정 지역 위주의 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게 전가된 책임은 외면되고 있다.

본 발제문은 전세계적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배출량의 감소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특히 이러한 환경 오염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 위기의 책임을 따지는 데 있어, 그 주체를 '인류'라는 단일한 대상이나, '백인-흑인/원주민'의 이분법을 통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문제를 생산-소비의 글로벌한 연결망과 그 속에 내재된 불평등의 역사를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이고 단일한 서사를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겪어온 다양하고 특수한 착취의 역사를 인정하는 '다중심적 비판'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때서야 동아시아와 '글로벌 남부'의 국가들이 단순한 '오염 유발자'가 아닌, 불평등한 구조의 피해자이자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